정부 "日 방침 바뀌어도 수산물 수입 금지는 양보 못해"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
日정부 WTO 제소 철회 보도에
"타국 선의에 의존해 결정 안한다"

정부는 21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본측이 세계무역기구(WTO)에도 다시 제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일본 측의 (대응) 방침 변화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더 압박하지 않고 세계무역기구(WTO)에도 다시 제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으며, WTO는 2018년 2월 한국에 패소 판정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정은 2019년 4월 무역분쟁의 최종심에 해당하는 WTO 상소기구 판정에서 뒤집혔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차장은 전날 보도를 언급,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의 WTO 제소에 대응해야 할 우리 정부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대의 국익"이라며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타국의 선의에 의존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또 "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으며 외교부에서 해당 보도의 사실관계를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다핵종제거설비(ALPS) 고장 사례에 관련해 설명했다.

ALPS는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에서 핵종을 제거하는 핵심 시설이다.

앞서 정부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설비 부식, 전처리설비 필터 문제, 배기필터 문제 등 총 8건의 ALPS 고장 발생을 확인했으며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 처장은 "전날 '정부가 ALPS가 8차례 고장났다고 밝혔는데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4건이 더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 4건은 별개의 건이 아니라 이미 설명한 바 있는 8건에 포함해서 분석중인 사안이며, ALPS 출고 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윤 대통령 부부 BIE 총회 참석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파리 이시레몰리노에서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기현 "검사 공천 없다…대통령도 같은 생각"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
"총선 '지역 사령관' 지정해 전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1일 내년 총선에서 이른바 '검사 공천'이 없을 것이라는 데 "용산(대통령실)의 뜻도 똑같다"며 "'검사 왕국'을 걱정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검사 공천 없다"며 "제가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 공천을 하겠다, 검사 왕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나"라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번 총선을 이겨야 하는데, 총선을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심에 부합하는 인물의 공천, 그 뜻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과) 서로 간에 차이가 없다"며 "용산이 오더(주문)해서 낙점한다, 검사들이 마구마구 (지역구에) 박힐 거라는 그런 일 없다. 그만큼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이뤄져 있다"고 덧붙였다.

당헌·당규에 규정된 공천룰에 변화를 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천룰 개정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 지역별로 '지역 사령관'을 내세워 전권을 주고 지휘를 맡길 생각이라며 "(당 대표) 경선 때 저와 경쟁을 벌였던 분 중에 훌륭한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분들을 다 활용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기·가스요금과 관련, "아직 예측 수준이긴 하지만 (올해) 후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며 요금 동결을 시사했다.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 추진 방침에 대해선 "세수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법인)세율을 낮춰서 투자 유치를 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민심을 얻어가는 방법으로 앞으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는 세수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는데 실제로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연말까지 이대로 가면 60조~70조원 이상 세수 결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김기현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국힘 의원 67명 포기 서약

김웅 "헌법상 권리 포기 불가능"

국민의힘 의원 67명이 2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더 많은 의원의 서약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진행했다.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 67명은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라고 적힌 서약서에 서명했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 중 김웅 의원만 유일하게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가 불가능하다'며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서명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의총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로부터 별도로 서약서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이 대표는 앞서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를 밝힌 만큼, 김 대표가 제안한 서약에는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에게 "(서약 참여는) 개인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며 "많은 의원이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이 있을 수는 있다"며 "개인적 입장이 다른 분들을 굳이 무리하게 동참시킬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라디오에 출연해 '불체포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검찰 독재정권과 싸울 수 있겠느냐'며 포기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얘기 같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정치적 탄압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송 전 대표의 말이) 일리 있어 보이지만, 지금 대명천지에 그런 시대가 지난 지가 20~30년 이상 됐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군부대 방문·세미나…국힘, 호국보훈 행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달 내내 군부대 방문, 보훈 관련 세미나·간담회 참석 등 호국보훈 관련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보수의 가치'를 부각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는 한편, 보훈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합을 맞추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기현 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전협정 70주년·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특별전'을 찾았다. 전날 강원 철원 육군 3사단(백골부대)을 방문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호국보훈 관련 일정 소화다.

앞서 김 대표는 이달 1일에는 경기 수원 프랑스군 6·25전쟁 참전 기념비를 참배하고 국가유공자 재활체육을 지원하는 보훈 재활센터에 방문해 상이군경 체육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고 12일에는 한국보훈포럼이 주최한 국가보훈학술세미나에도 자리했다.

김 대표는 오는 25일 6·25전쟁 7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이처럼 호국보훈 행보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총선을 약 10개월 앞두고 '보수정당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으로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집토끼'인 보수층을 견고하게 지지층으로 끌어안는 것 역시 총선 승리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